

「평창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년 8월 25일, 평창군수 제출
- 회부일자: 2025년 9월 4일 회부
- 상정일자: 제30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2025년 9월 4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세정과장)

가. 제안이유

-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용어 정비 등 현행 조례를 보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일반우편 송달기준 금액인상(안 제4조제1항)
 - (기존) 30만원 → (변경) 45만원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현행화(안 제8조제3항)
 - (기존) 영 제62조의2제5항 → (변경) 영 제62조의2제6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정유진)

※ 검토보고서 전문 [붙임 1]

4. 질의 및 답변 요지: 「생략」

5. 토론 요지: 「없음」

6. 심사 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사항: 「없음」

붙임 1. 「평창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2. 「평창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평창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조례안 개요

- 제 안 자 : 평창군수 제출
- 제안일자 : 2025. 8. 25.
- 회부일자 : 2025. 9. 4.
- 상정일자 : 2025. 9. 4.

2. 제안이유

-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용어 정비 등 현행 조례를 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일반우편 송달기준 금액인상(안 제4조제1항)
 - (기존) 30만원 → (변경) 45만원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현행화(안 제8조제3항)
 - (기존) 영 제62조의2제5항 → (변경) 영 제62조의2제6항

4. 검토의견

가. 관련 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30조에서 서류의 송달은 교부·우편 또는 전자송달로 하되, 구체적인 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르도록 위임하고 있음.

나. 입법의 취지

- 2023. 12. 29.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납부지연가산세 및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가 면제되는 납세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의 기준금액이 30만원에서 45만원 미만으로 상향되었으며 이는 물가와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소액채납액 기준을 상향한 것이므로 이와 동일하게 현 조례상 일반우편 송달기준 금액을 정비하고, 2024. 12. 31.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현행화하여 상위법과의 불일치를 해소하고자 함.

다. 조례안의 주요내용

- 안 제4조(서류송달의 방법)에서 일반우편 송달기준을 상위법의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기준금액인 45만원으로 상향함.
- 안 제8조(선정대리인 신청·통지 등)에서 인용조문을 영 제62조의2제5항에서 영 제62조의2제6항으로 변경하여 법령 정합성을 확보함.

5. 종합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일반우편 송달기준 금액을 30만원에서 45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인용 조문을 정비하여 제도의 합리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이번 개정으로 등기우편 송달 건수의 감소에 따른 우편 비용의 절감 효과와 행정의 효율성이 기대되는 반면, 일반우편 송달 확대로 송달여부에 대한 분쟁 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으며 재송달 등의 행정력 낭비 우려가 존재하므로 조례 개정과 함께 전자송달 방법의 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지방세기본법**

제30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2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교부·우편 또는 전자송달로 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제55조(납부지연가산세)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납세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4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항 제4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6조(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납세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4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항 제3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평창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56
----------	-----

제출연월일 : 2025. . .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용어 정비 등 현행 조례를 보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일반우편 송달기준 금액 인상

(안 제4조제1항)

- (기존) 30만원 → (개정) 45만원

나.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문 정비 (안 제8조제3항)

- (기존) 영 제62조의2제5항 → (개정) 영 제62조의2제6항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별첨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 1) 입법예고(2025. 5. 14. ~ 2025. 6. 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평창군 공고 제2025-782호, 세정과-7902(2025. 6. 5.)호
-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기획예산과-7704(2025. 5. 21.)호]
- 3) 부패영향평가 : 부패유발요인 없음 [기획예산과-7704(2025. 5. 21.)호]
- 4)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가족복지과-18408(2025. 5. 14.)호]
- 5) 법제심사 : 적정 [기획예산과-8952(2025. 6. 13.)호]
- 6)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원안의결 [기획예산과-9422(2025. 6. 23.)호]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후단 중 “30만원”을 “45만원”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영 제62조의2제5항”을 “영 제62조의2제6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교부,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u>30만원</u>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4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 ----- -----. ----- ----- ----- <u>45만원</u> ----- -----.
② · ③ (생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8조(선정대리인 신청 · 통지 등) ① · ② (생략)	제8조(선정대리인 신청 · 통지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u>영 제62조의2제5항</u> 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고 규칙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③ ----- ----- ----- ----- <u>영 제62조의2제6항</u> ----- ----- ----- -----.
④ ~ ⑥ (생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발췌

□ 지방세기본법 [시행 2025. 1. 1.]

[법률 제20629호, 2024. 12. 31., 일부개정]

제55조(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 또는 초과환급분(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고, 제4호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기간은 60개월(1개월 미만은 없는 것으로 본다)을 초과할 수 없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의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한다)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일수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해당여부를 판단할 때 「신탁법」에 따라 신탁된 주택은 위탁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

2. 초과환급분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한다)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일수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3.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하고, 가산세는 제외한다) \times 100분의 3
4. 다음 계산식에 따라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계산한 금액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하고, 가산세는 제외한다) \times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제66조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이 변경되는 경우(부정행위로 인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경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제88조제2호에 따른 주식등의 취득가액이 감소됨에 따라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과소납부하거나 초과환급받은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③ 지방소득세를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할 때 실제 신고납부한 날에 실제 신고납부한 금액의 범위에서 당초 신고납부하였어야 할 과세기간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지방소득세의 신고가 제53조에 따른 신고 중 부정행위로 무신고한 경우 또는 제54조에 따른 신고 중 부정행위로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납세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4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항 제4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납세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인 경우에는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6조(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 ①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50(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을 합한 금액은 100분의 10)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제3호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기간은 60개월(1개월 미만은 없는 것으로 본다)을 초과할 수 없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times 100분의 3
2.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times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일수 \times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3. 다음 계산식에 따라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계산한 금액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 \times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납세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4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항 제3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5. 1. 1.]

[대통령령 제35175호, 2024. 12. 31., 일부개정]

제62조의2(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① 법 제93조의2제1항에 따라 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이 조에서 “이의신청인등”이라 한다)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이의신청인등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의신청인등의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동의에 관한 사항

② 법 제93조의2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4. 12. 31.>

1. 종합소득금액의 경우: 5천만원. 이 경우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전에 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전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을 대상으로 하고, 그 신고기한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을 대상으로 한다.
2. 소유 재산의 가액의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른 재산의 평가 가액 합계액이 5억원. 다만,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가. 「지방세법」 제6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

나.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회원권

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2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승용자동차

③ 법 제93조의2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전에 지방자치단체 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전전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과 해당 사업연도말의 자산가액을 대상으로 하고, 해당 신고기한 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과 해당 사업연도말 자산가액을 대상으로 한다. <신설 2024. 12. 31.>

1. 매출액의 경우: 3억원

2. 자산가액의 경우: 5억원

④ 법 제93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액·상습채납자 등”이란 「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를 말한다. <개정 2024. 12. 31.>

⑤ 법 제93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천만원을 말한다. <개정 2024. 12. 31.>

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1.>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비용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본 의안의 시행으로 추가 발생하는 비용이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 기획재정국 세정과장 전 재 준
연락처	(033) 330 - 2270